

제 7 장 지장학적 메타지리: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토론문

2 주일 기간 동안 이 책을 대략적으로나마 끝까지 읽어 가면서, 이제는 자신의 인식에 근거하여 지정학에 대해 주관적이고 다소 편견이 개입된 판단을 내려 보고자 한다.

저자는 서두에서 지정학을 세계적 규모에서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학문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내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개인 자신의 관찰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제 7 장에서 다루는 세계화(globalization), 즉 세계적 연결의 확대를 예로 들어 보면 거시적 규모에서 보면 세계화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모든 사람은 이 네트워크 안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이 실제로 각 개인에게 어느 정도 미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태국 농민들을 인터뷰한 사례가 있다. 당시 그들은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세계화를 구성하는 이 네트워크에서 실제 단위는 무엇인가? 국가인가, 기업인가, 지역사회인가, 아니면 개인인가?

둘째, 발제자가 언급한 "서구 기업들의 석유자원 수탈과 해당 지역에 주둔한 미군"이라는 표현은 중동의 혼란이 지닌 본질을 건드리고 있다. 석유를 핵심적인 생산 기반으로 삼는 현대사회에서 석유는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고 그 지역의 질서를 설계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생산구조와 생산력의 관점에서 지정학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하지 못한다. 저자는 권력의 네트워크와 지리적 구조를 설명하지만, 그 권력이 어떠한 물질적 생산 기반 위에서 형성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고 있다. 제 7 장 자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260 쪽 이후 262 쪽까지의 내용에서 저자는 미국이 자유무역과 세계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은 자국의 농민과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보호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저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델스키의 모델에 따르면 세계화는 미국 또는 다른 국가들에 의한 경제적·정치적 결정의 산물로 파악할 수 있다. 세계화는 세계 지도국이 축복한 정치적·경제적 틀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수화된 정치·경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단은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최근 몇 년 동안 트럼프 정부가 국제기구에서 취해 온 태도와 추진해 온 경제정책을 보면, 미국 내 무역보호주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미숙한 개인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세계화는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지리적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에게 세계화는 자유무역의 산물이자 도구였다. 21 세기 초 미국이

세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비용보다 컸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리고 미국은 철강산업과 농업을 세계시장에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았다. 오늘날 러스트벨트로(또 한국 조선업 미국에 도입) 대표되는 미국의 산업 공동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세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면서, 미국은 세계화를 거부하거나 제한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것 역시 초국적 네트워크의 논리보다는 독립된 민족국가가 추구하는 현실적 이익에 기초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계화는 민족국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리적 규모라기보다는, 국가의 현실적 이익에 따라 수용되거나 제한되는 정치·경제적 수단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261 쪽에서 다루는 반세계화 운동과 관련해서도 여쭙보고 싶다. 최근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탈세계화(degloabalization)가 과연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추세가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265 쪽부터 269 쪽에서 저자는 정의하기 어려운 테러리즘의 지리적 요소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발제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 나는 테러리즘이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것이 하나의 특정한 '주의'나 이념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맥락에서 테러리즘이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자가 제시한 세 가지 지리적 요소, 즉 '행동의 상징적 속성', '지리적 범위의 확장', '정치적 이타주의의 실현'이라는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테러 세력은 매우 많다. 한국 광주민주화운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리라고 생각한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저자가 제시한 세 가지 지리적 요소에 상당히 부합하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알려져 있듯이, 현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은 결코 테러리즘이 아니다. 반면 당시 전두환 집권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광주민주화운동은 테러리즘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물론 당시 정부가 사용한 공식적인 표현은 '반란'이었다.

이 사례는 테러리즘이 행위 자체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이 다른 행위자의 폭력과 저항을 규정하고 명명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어떤 행위가 테러리즘인지 아닌지는 행위의 형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정의하는가, 어떤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